

# 외국인력 정책, 도입 중심에서 통합적 활용·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 5.12.(화)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김정호 의원, 김주영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 의원, 강득구 의원, 안호영 의원, 허종식 의원, 곽상언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은 공동으로 5월 12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의 인구 유출 등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동안의 외국인력 정책은 취업비자의 종류에 따라 소관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나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현장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고, 지난 4월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4월 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며 보호의 사각지대 없는 외국인력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부 논의의 연장선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외국인력 정책의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의 두 축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 정책을 기존의 유입 중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숙련 축적 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권익보호를 바탕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적극적 인력 활용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노용진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며,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을 넘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의 3단계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숙련 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각 유형의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의 숙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기부여 기제와 직업훈련 지원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영 센터장(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운영을 넘어, 입국-체류-귀국·정주로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생애주기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원에 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적인 체류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은 최영기 前한국노동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호 기후노동위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기후노동위 위원들은 “현재까지 외국인력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산업현장 수요 반영이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등 권익 보호가 미흡했다”라며, “이주노동자 등이 동반자로서 함께 우리와 살아갈 수 있도록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핵심 일원”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간의 논의와 오늘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한은숙 (044-202-7157)
		담당자	사무관	김경은 (044-202-7735)
			주무관	조혜수 (044-202-7737)



## 붙임 1

#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요

□ **[주최]** 김정호 위원장, 김주영 의원, 이학영 의원, 박정 의원, 강득구 의원, 안호영 의원, 허종식 의원, 곽상언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 **[일시·장소]** '26.5.12.(화) 14:00,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주제]**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 방향 모색

### □ 참석자

○ (인사말씀)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차관

○ (발제) ①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  
② 서울과학기술대 노용진 교수  
③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센터장

○ (토론) 좌장 최영기 前한국노동연구원장

- 민주노총 김호세아 정책차장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훈 외국인력지원실장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운영위원장
-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선임연구위원
-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 법무부 박상욱 출입국정책단장
- 고용노동부 장현석 국제협력관

### □ 진행 순서(안)

※ 행사 전체 공개

시간		내용
14:00~14:20	(`20)	▪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4:20~15:05	(`45)	▪ 발제 - ①취업체류자격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규용) ②숙련 기능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안(노용진) ③외국인력 권익보호를 위한 체류지원 고도화 방안(이영)
15:05~16:25	(`80)	▪ 토론준비 및 토론
16:25~16:30	(`5)	▪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입니다.

먼저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고용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노동계, 경영계, 관계기관, 전문가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에 따른 **인력부족**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에 이를 만큼  
**이주노동자**는 우리 **산업현장**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외국인력**에 대한 **높은 수요**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폭행** 등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현재의 이주노동정책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국내 노동시장과의 조화, 지역의 여건,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라는 다양한 과제들을  
보다 균형 있게 담아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간의 외국인 고용정책이  
당장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력 도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부처 간 경계를 넘어, 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고용정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도입-활용-체류지원-정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운영하며,  
노동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분들과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해 왔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향을 토대로 다음의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노동시장 수급 상황과 정합성 있게  
외국인력 정책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 수급설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둘째, 비숙련 외국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고,  
숙련을 쌓은 우수인력의 장기체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인권, 중소기업 인력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업기간, 사업장변경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전체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처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선제적 감독행정과 체류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한계를 되짚어 보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력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그간의 논의를 적극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